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창군을 중심으로 -

2014년 11월

과 정 : 제11기 핵심리더과정

소 속 : 고 창 군

교 변 : 35번

성 명 : 이 태 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427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1. 연구대상	428
2. 연구범위	428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의 기본방향	428
2. 자료의 수집방법	428
3. 자료의 분석 및 해석방법	429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소상공인의 정의 및 특성	
1. 소상공인의 개념적 정의	430
2. 소상공인 유사개념	431
3. 소상공인의 특성	432
제2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각 국의 사례	
1. 각 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434
2. 우리나라와 각 국의 비교(시사점)	448
제3절 분석체계	452
1. 분석국면 및 변수	452
2. 분석의 틀	453

제3장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고창군 사례-)

제1절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	--

1. 고창군 사례	454
2. 타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현황	457
3. 소상공인 지원방식 비교	460
제2절 운영실태 분석	
1. 준비 단계	461
2. 집행 · 운영 단계	462
3. 사후관리과정 분석	467
제3절 문제점	
1. 준비과정상 문제점	469
2. 집행과정상 문제점	470
3. 사후관리상 문제점	471
 제4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472
제2절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1. 준비단계상 개선 방안	475
2. 집행 · 운영상 개선 방안	476
3. 사후관리상 개선 방안	478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479
제2절 결 어	480
참고문헌	482
부 록	483

표 목 차

〈표 2-1〉	소상공인 범위	430
〈표 2-2〉	일본 소규모기업의 설비자금 대출조건	438
〈표 2-3〉	한국의 소상공인과 대만의 소기업 분류기준 비교	439
〈표 2-4〉	대만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자	442
〈표 2-5〉	독일의 중소기업 구분기준	444
〈표 2-6〉	영국의 영세 중소기업 분류기준	446
〈표 2-7〉	분석변수	452
〈표 3-1〉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454
〈표 3-2〉	소상공인 지원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	456
〈표 3-3〉	전라북도내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459
〈표 3-4〉	소상공인 지원자금 조성 목표액 및 조성액	462
〈표 3-5〉	금융기관 적격심사	465
〈표 3-6〉	소상공인 운전자금 용자실적	465
〈표 3-7〉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실적	466
〈표 3-8〉	대출형태별 분석	467
〈표 3-9〉	대출이율 분석	468



그림 목 차

〈그림 1〉 일본의 소기업 경영개선 자금 대출과정	437
〈그림 2〉 분석모형	45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삶의 근간을 둔 소상공인들은 최근의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경제 침체에 따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3중고와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느껴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도·소매업을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형유통업의 급속한 확산은 도·소매상권의 매출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류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내지 자생력 확보 보다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¹⁾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정부의 정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상공인의 비효율성이 점증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원기관도 소상공진흥원, 소상공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등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져 읍·면단위 기초자치단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워 자금의 지원대상자도 대도시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 보다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²⁾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지원과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임길상,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행정대학원, 2006, p1.

2) 고창군에서 2010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음.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1. 조사(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고창군)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같이 고창군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2010도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와 이차보전(이자차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2. 연구범위

실태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까지 한정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고창군)로 한정되었으나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일부 참조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의 기본방향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운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의 입장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추었다.

2. 자료의 수집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연구(field study)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소상공인에 관한 이론 정립을 위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및 인터넷 등 각종 문헌을 통한 기술적 조사를 하였다.

현지연구는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제 분야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규정, 지침, 교육자료, 계획서, 평가자료 등 내부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각 실무자 및 소상공인과 전화 또는 직접방문 조사함으로서 외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및 해석방법

문헌조사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주로 이론적 배경의 정립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해석·활용하였다.

현지조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주로 운영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타 자치단체의 상호 비교분석을 하는데 유용하게 해석·활용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소상공인의 정의 및 특성

1. 소상공인의 개념적 정의 3)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방법,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정부가 특별히 주목하여 지원할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분류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의 범위 설정의 기준은 정책대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내의 경우 소상공인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업종별 상시 종업원 수에 의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⁴⁾

<표 2-1> 소상공인의 범위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10인 미만	50인 미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인 미만	
그 외의 업종		
		10인 미만

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2.01.25.대통령령 23527호, 중소기업청)

3) 윤상용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pp7~8.

4) 제2조(정의)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 8804호)

따라서 소상공인은 다음의 범주에 있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범위 안에 속해 있으면서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집단이며, 개인사업 및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기업 형태의 구분 없이,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집단이다.

2. 소상공인 유사개념 5)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의 범위와는 별개로 종사자 지위에 따라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노동자를 의미한다. 정부의 영세자영업자대책(2005.5.31)을 보면 소상공인 문제를 영세자영업자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혼용하여 사용한다.⁶⁾

선진국은 자영업자를 기업가로 인식하여 자영업자의 문제를 기업가 정신의 진작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만을 주로 기업가라고 인식할 뿐 소상공인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사업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경향이 크다. 전문직 자영업자부터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까지 자영업자 안에 다양한 계층이 존재해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일관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많다.⁷⁾

따라서 정책지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체 규모(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1~4인 또는 1~9인 미만)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유급근로자 없이 자영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합하여 지칭하는 사업주이다.

5) 윤상용 외, “전개논문”, 충남발전연구원, p8.

6) 임금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주, 고용한 사람이 없는 고용주를 ‘자영자’라고 정의하고,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쳐 ‘자영업주’라고 함. 소상공인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 조사에 근거한 개념이고, 자영업자는 사업체 운영자 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 ‘경제활동인구통계’이기 때문에 양자의 개념은 서로 일치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로 표현.

7)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 노동인구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임

3. 소상공인의 특성 8)

소상공인은 전통적인 기업 속성과 현대적인 기업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자본을 출자한 자본가 소유의 개인적 경제기구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은 생계형 창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소상공인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명의 종사자와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의 수는 1,000만 명 이상이 된다. 이 숫자는 전 국민의 25.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25.0% 이상의 경제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은 다수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소상공인 창업은 고용창출의 역할이 크다.

소상공인은 전체 산업체 종사자의 43.6%를 고용하고 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생활에 활력을 갖게 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

3)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로 활동하고 있어 매우 영세하다.

소상공인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는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바, 소상공인의 사업체 한 개당 평균 1.92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중 5명 미만이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영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기업들과는 달리 규모가 영세하고 생업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이남주,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pp6~11.

4) 소상공인은 소규모의 자금으로 창업을 한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된 총 자본의 규모는 대부분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연구에 의하면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전체의 49.5%이었으며, 1억 원 미만은 전체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창업자금의 규모는 7천 6백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형태의 소자본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5) 창업자금 조달은 타인자본의 이용도가 높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창업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50.0% 정도는 타인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은 정부의 정책자금, 금융기관, 사금융 등으로 부터 조달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담보제공이나 창업투자기관의 투자를 받는 형태는 거의 없다.

6) 업종이 다양하다.

산업 분류기준으로 볼 때 소상공인은 도매·소매업이 전체의 33.4%,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4%, 제조업이 9.8%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이 9.5 등 업종이 다양하다. 그 외의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특히 대기업의 주 분야인 제조업 분야보다 비제조업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소상공인 업종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비중이 커짐은 현대산업 형태의 변화와 흐름에 일치하고 있어 관심과 기대가 크다.

7) 사업주와 경영인이 동일한 개인 기업형이다.

소상공인의 종사자 수에서 보면, 1~4인 사업체수가 88.3%(2,454,000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5~9인이 2.1%(57,766개)를 나타내고 있다. 조직의 형태로는 개인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영세한 개인사업체이다. 그리고 실제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사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인이 동일한 형태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8) 종사자가 가족형태를 유지한다.

종사자 지위별로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자영경영주 및 무급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상공인은 가족중심의 기업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우 한 가족의 절대적인 소득원이라는 측면을 시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제조업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가족기업은 오너 경영자가 경영하는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다. 나아가 가족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와 가족기업만의 독특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승계문제, 전략문제, 그리고 가족 자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특성은 이와 같이 다양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중견 및 대기업과의 하청 분업관계에서 부분품을 생산·조립하거나 생산품의 도·소매 등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적으로 취약한 경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제2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각 국의 사례

1. 각 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9)

1) 미국의 사례

(1) 소액자금 지원제도 정책방향

미국에는 약 2,200만개의 중소기업(small business)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특별히 규모가 작은 기업을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미국의 small business를 한국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업을 모두 포함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small business 중에서 특별히 규모가 작은 기업을 나타내는 microbusiness(영세기업)라는 표현은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문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9) 이남주,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의대학교경영대학원, 2003.6, pp16~51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소상공인과 같은 그룹을 별도로 정의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microbusiness(영세기업) 및 소액대출에 대한 제도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전체 속에서 특별히 소액대출,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미국정부가 보는 소액 자금지원(microloan financing)의 목적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정책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경제의 기본적인 하부구조로서 풀뿌리 자본주의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들의 전략적인 육성정책의 입장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갖는 벤처형 창의 정신이 미국 경제에 창의적인 역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서는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후생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형평성 있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의 시각이다.

이러한 정책방향 중에서도 특히 중시되는 것은 세 번째 사항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편으로는 기본생활비에 해당하는 식품권(Food Stamp)이나 최저생활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생활보조에 이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극빈층이 자립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 극빈층의 긴급소액대출(express microloan financing)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매우 폭 넓은 시각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기구의 참여에 의하여 매우 활발하게 소액대출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자금대출보다는 보증에 의한 간접대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보증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자금지원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액분산의 정책적 기조를 담당하고 있어 한국의 집중적 육성정책의 기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단계별 자금지원은 최초의 대출은 \$100에서 \$5,000에 이르는 매우 적은 규모로 시작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며 지원자금의 회수여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점차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단계별 정책

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소액대출(microloan)의 규모는 \$10,000(1,200만원 상당)이며 최장 6년간의 상환기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물론, 대출 상환 시기는 자금의 종류, 규모,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최초의 1년 정도는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유예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자율도 자금기관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기준이자율(prime rate)에 2~3%를 붙이는 정도로 시중이자율 보다는 현격하게 낮다. 지원하는 대상은 소수의 투기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문호가 열렸으며 그 기준으로 \$6,000,000이하의 자산규모와 \$2,000,000 이하의 연간소득규모를 병행하여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대체적 기준안(alternate standard ruling)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대개 비영리법인이 보통이며 각 기관에 따라 대출자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담보와 같은 물적 보증을 요구하는 특성이 다르다. 물론,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신용보증이 포함되기도 한다. 자금지원의 절차는 소규모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청과 소액대출을 취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청은 보증지원의 규모를 할당하며 각 금융기관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 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대출약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먼저 중소기업청과 자금지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대출보증약정(Loan Guarantee Agreement)를 체결한다. 이 약정은 대출기관이 장래 발생할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약정이다. 2단계는 특정한 자금지원 요청에 대하여 각 요소들을 가중평가하고 적절한 대출기간을 결정한 후, 중소기업청의 보증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3단계는 대출규모와 성격,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자격여부에 특정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실시를 통하여 재심결과를 통보한다. 4단계는 대출기관에게 회송될 두 세트의 상기 심사결과서와 보증신청서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의 보증신청서류 일체를 자금신청자에게 교부한다. 5단계는 중소기업청은 대출기관의 대출결정과정을 평가하여 대출 조건을 확정한다. 6단계는 대출기관의 보증신청서(Lender's Application for Guarantee)를 두 세트 작성하여 자금신청서에게 교부한다. 마지막으로 7단계는 두 세트의 보증신청서 중 서명과 일자가 기재된 원본을 중소기업청 지역사무소(또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보고한다.

2) 일본의 사례

(1) 소규모기업의 경영개선 자금융자 제도

현재 소규모기업대책으로서 상공회, 상공회의소가 경영개선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도의 효과가 낮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의욕을 잃는 사태를 야기하는 가능성이 있어 경영개선 보급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저해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제도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와 금융의 일체화를 기함으로써 경영개선 보급 사업을 한층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973년에 제정되었다. 이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출대상자는 최근 1년 이상 동일상공회 등 지역내에서 사업을 하고 상공회, 상공회의소의 경영지도원에 의한 경영지도를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 등(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상업, 서비스업의 경우 5명 이하, 제조업 기타 등은 20인 이하의 기업)으로 상공회,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대출조건은 대출한도액이 550만엔이고, 대출금리는 2.1%이다. 대출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는 6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4년 이내로 되어 있다.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대출제도의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의 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을 함으로서 국민금융공고는 소규모사업자나 신규 개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한다. 이때 경영지도원은 소규모사업자나 신규 개업자에 대한 지도 및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에 보고한다.

<그림 1> 일본의 소규모기업 경영개선 자금대출과정 10)



10) 이남주,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의대학교경영대학원, 2003, p24.

(2) 소규모기업의 설비자금 제도

소규모기업의 창업 및 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설비도입 촉진을 목적으로 소규모기업 설비자금 제도를 설치하여 설비자금 대출사업 및 설비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제도는 1999년까지 실시하고 있던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였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설비도입자금 조성법에 의해 2000년도부터 새로이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출조건은 소규모사업자나 창업자에게 설비자금 대출로서 소요자금의 1/2인 범위 내에서 4,000만 엔까지 대출을 하소 있으며 상환기간 7년 이내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이나 물적 담보를 필요로 한다. 사업별 대출조건은 <표 2-2>과 같다. 설비자금 대출사업 및 설비대여사업의 체계는 설비자금대출 및 설비대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계통에 따라 소규모사업자에 지원되고 있다. 대출·대여 신청수속은 각 지방관서의 대출기간에 신청을 하고 서류조사 및 기업진단,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대출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수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관서 대출기관에 따라 다소 다르다.

<표 2-2> 일본 소규모기업의 설비자금 대출조건 ¹¹⁾

구 분	설비자금대출사업	설비대여사업	
		할부사업	리스사업
대상자	소규모사업자(주1) 및 창업자(주2)		
대출 · 대여	4,000만엔(소요자금의 1/2) (1)창업후 1년 이상의 창업과 대출한도액 6,000만엔 (2)산업활력 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대출한도액 6,000만엔(대출비율 2/3)	6,000만엔 (창업후 1년미만의 창업자는 3,000엔)	
이자	무이자	할부손료 : 3%이하 보증금 : 10%이하	년 5.3%정도 (세금 보험료포함)
상환기간	7년 이내(공해방지 시설은 12년 이내)		
담보보증인	연대보증 또는 물적담보 필요	원칙적으로 보증인 필요 담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11) 일본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과, 2000.5. 이남주, “상계논문”, p 26에서 재인용.

주1 : 소규모사업 등은 다음과 같은 자를 청한다.

- a. 소규모사업자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20인 이하(상업·서비스업은 5인 이하)
- b.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다음 요건에 맞을 것
 - 은행 및 정부계 금융기관(국민생활금융공고, 주택금융공고 및 오키나와 개발진흥 금융공고 제외)으로부터 차입금장고가 3억엔 이하 일 것
 - 최근 3년간 사업년도의 정상이익이 평균 3,500만엔 이하 일 것
 - 대기업으로부터 출자비율이 단독으로 1/3을 넘지 않을 것

주2 : 창업자는 다음과 같은 소규모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a. 1개월 이내에(회사설립의 경우 2개월)창업을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자
- b. 창업후 5년 이내의 자

3) 대만의 사례

(1) 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정책방향

대만에서는 현행 헌법상 소기업이라는 용어와 분류는 있으나 소상공업이라는 용어와 독립된 분류는 없다. 대만에서는 현재 기업을 구분함에 있어 1991.2월에 제정된 중소기업발전조례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표2-3> 과 같다.

<표2-3> 한국의 소상공인과 대만의 소기업 분류기준 비교¹²⁾

업 종 별	한국의 소상공인	대만의 소기업
제조업·광업·건설업	상시종업원 9인 이하	상시종업원 19인 이하
도소매업외 기타상인	상시종업원 4인 이하	상시종업원 4인 이하

12) 대만중소기업발전조례 제2조, 제3조, 이남주, “상계논문”, p 29에서 재인용.

대만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육성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의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 현재의 중소기업정책은 1991년 2월에 공포된 ‘중소기업발전조례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협조하고, 중소기업간 상호합작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이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기업의 스스로 자생력을 배양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제부 중소기업처, 국제무역국 및 공업국의 주관하에 운용되는 중소기업 보도체계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보도 체계는 중소기업처가 주관하는 경영관리·재무유통·상호합작·품질향상·정보관리 지원체계, 공업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생산기술·산업안전·오염방지 지원체계, 국제무역국의 주관하에 운용되는 시장개발 및 마케팅지원체계 등 모두 10개의 지원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에서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처에 의해 운용되는 재무유통지원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금융지원은 각종 금융기관을 통한 소요자금의 직접지원,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소요자금의 간접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연합보도중심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 융자를 위한 각종 재무적 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운영자금)

대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형성된 재무유통지원체계는 중소기업은행과 일반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원 주체가 되며, 여기에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연합보도중심(中小企業聯合輔導中心), 각종 은행 및 합작 금고에 설치된 중소기업복무보도중심(中小企業服務輔導中心)등이 주요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의 융자업무는 일반 상업은행 외에 중소기업 전문은행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은행은 1975년 신은행법(新銀行法)이 개정되면서 설립된 공영인 대만중소기업은행과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은행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원천은 각종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자금과 대만은행이 접수하는 우체국 저축, 그리고 행정원 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등이 있으며, 이밖에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융자, 신용합작사 및 농어회 신용부(農漁會 信用部)등의 융자도 부분적으로 자금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증은 1974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기금의 설립목적은 한편으로는 발전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물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융자의 위협을 분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융자의 믿음을 제고하는데 있다.

1972년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7개의 은행 및 합작금고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성립된 중소기업연합보도중심(中小企業聯合輔導中心)에서는 해당은행이나 합작금고에 융자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와 협조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연합보도중심이 성립된 초기에는 주로 융자신청 한 중소기업들중에서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진단과 지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본 기구의 주요기능이었다. 그 후 일반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회계제도가 부실하고 재무지식이 부족한 것이 경영상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 기구의 업무 범위가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 건전한 회계제도 도입, 경영체질 강화 등을 위한 지도 및 협조로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제는 크게 융자, 보증 및 지도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본 지원체계의 기능이 상당히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성·수행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던 자금유통상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만에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융자는 그 성격상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중소기업 경영개선 및 정책성자금 융자,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청년창업 융자 등이다.

<표2-4> 대만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자 13)

(단위 : 대만달러)

성 격	대 상	주요 용도	용자한도	상환기간
일반운전 자금용자	· 업무 및 재무상태 양호한 자 · 신용자료 완전구비 가능자	· 생산과 판매에 소요되는 단기성 임시성·계절성 운영자금	· 1년 영업액의 40%	· 1년 이내
중장기운전 자금용자	· 최근 3년간 신용 양호자 · 업무가 정상적이고 발전 잠재력을 갖춘자 · 용도가 정상적이고 발전 잠재력을 갖춘자	· 중장기성 운전자금	· 전년도 영업액의 20%~30%	· 1년 이상 ~7년 이내

대만의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운전 자금 용자와 중장기운전자금용자가 있다. 일반운전자금용자는 단기성 · 임시성 · 계절성의 운전자금을 말하며, 중장기 운전자금용자는 그 용도가 분명한 중장기성 운전자금을 의미한다. 이들 운전자금의 용자대상, 용도, 용자한도, 상환기간 등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소기업이 경영개선 및 정책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대만에서는 이것을 중소기업 전안융자(中小企業 傳案融資)라고 한다. 여기서는 환경오염개선, 노무원가 절감, 공장부지 취득, 경쟁력제고, 투자의욕제고 등을 위한 용자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체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는 크게 용자, 보증 및 지도 등 3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들 금융지원체계의 기능들은 매우 종합적 · 체계적으로 구성 · 수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자금유통상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본 금융지원체계가 운영 면에서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에게는 실제로 큰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먼저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특징이 직접적인 금융지원 보다는 경영지도나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경영상의 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수

13) 조병선 · 이호, “일본 및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고찰”, 1990, 이남주, “전계논문”, p 34에서 재인용.

혜의 폭이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대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용자와 신용보증이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개선자금이나 정책성 자금은 세분화되어 있고 이자율이나 상환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금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태가 양호하거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자금지원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여전히 경영지도나 경영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지원정책이 실제적으로 기업의 자생력과 시장경쟁력을 배양하고 강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경영 지도를 통해 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4) 독일의 사례

(1) 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독일의 중소기업연구원(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IFM)은 <표2-5>와 같이 종업원 9인 이하, 연간 매출이 100만 마르크 (약 5억원)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독일의 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자기자본성 자금용자제도와 ERP-자본참여제도(ERP-Beteiligungnsprogramm), 장기저리용자시책으로 볼 수 있다.

자기자본성 자금용자(EKH-Darlehen)제도는 1979년 9월부터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지원되는 이 제도는 기업창업(기업신설 또는 기업인수시 모두 유효)과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하는 용자제도이다. 여기서 '자기자본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외부 차입금이나 만약 부도 또는 기업청산의 경우 다른 제3자 채무를 변제하고 난 다음에야 정부가 청구권을 갖게 되는 후순위 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은 자기자

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ERP-자본참여제도(ERP-Beteiligungugsprogramm)는 "소규모 기술집약적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방안(Beteiligungugsprogramm, BTU)" 이라고 하여 특히 기술지향적인 창업기업(우리나라의 벤처기업과 유사)과 신생기업을 위한 연방정부의 특별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본투자를 위한 재원은 ERP(European Recovery Program)-특별기금을 통해서 마련된다.

장기저리융자시책은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책과 더불어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ERP자금지원 프로그램 및 독인재건은행(KFW) 또는 독일조정은행(DTA)의 대출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책이 있다.

<표2-5> 독일의 중소기업 구분기준 14)

구 부	종업원 수	년 매출액
소기업	9인 이하	100만 마르크 미만
중기업	10~499인	100만 ~ 1억 마르크 미만
대기업	500인 이상	1억 마르크 이상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대출뿐만 아니라 단기운영자금도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ERP-자금지원은 낮은 이자율(현재 연5.5% -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 5년 거치20년 상환조건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재건은행(KFW)은 개발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이 부지, 건물의 구입, 건물신축, 기계설비 구입, 연구개발 투자비용, 타 기업의 취득이나 경영자에 의해 기업인수 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융자를 제공한다. 융자 한도는 연간 매출액 1억 마르크 미만인 기업은 투자액의 75%, 매출액이 1억에서 10억 마르크 미만인 기업은 투자액의 2/3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고 1천만 마르크까지 저리로(1994년4월 현재 연 6%)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독일균제은행(DTA)의 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창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창업 후 8

14) 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Bonn 1998, 이남주, “전계논문”, p 36에서 재인용.

년 이내인 기업이 지점설치, 제품 확대, 창고증설, 공장구입, 공장이전,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2년 거치 10년 상환, 투자소요액의 75%를(여타의 공공자금 지원액과 합하여), 최고200만 마르크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2) 신용보증제도

독일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보증 액의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바, 신용보증 액이 100만 마르크미만인 경우 신용보증조합(Kreditgarantiegenossenschaft) 또는 구동독지역에 새로 설립된 6개의 신용보증은행(Burgschaftsbank)을 통해서, 신용보증 액이 100만~2,000만 마르크미만인 경우에는 독인균제은행(DTA)을 통해서, 신용보증 액이 2,000만 마르크 이상인 경우에는 연방 및 주정부의 신용보증위원회(Bundesburgschaften)을 통해서 보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 관례적인 은행 담보나 보증여건을 갖추기 못하였을 경우 보증액 100만 마르크까지는 연방주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 신용보증조합 또는 보증은행을 통해 보증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우 이러한 단위 신용보증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통상 15년(건물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장 23년)이다.

독일의 신용보증조합의 특징은 지역별, 업종별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공간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은 연방주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런 지역적인 구성은 한편으로는 조합원인 상공회의소나 직능조직, 그리고 지역금융기관(특히 저축은행 Sparkassen 또는 협동조합은행 Genossenschaftsbanken)이 역시 지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데서 비롯되며, 다른 면으로는 신용보증조합이 중소기업경제의 촉진기구로써 특수한 주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사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지방자치구조를 따르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단위 신용보증조합들은 업종에 따라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수공업, 상업, 조경업 그리고 요식업 등과 같이 조합이 잘 조직된 업종들은 거의 모든 주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개개의 신용보증조합들은 조합 규모나 성격이 다양하다. 이러한 지역별, 업종별 세분화된 신용보증조합들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보다 더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방주 단위로 조직된 단위 신용보증조합들의 상부조직으로는 수공업연방 신용보증조합, 상업연방신용보증조합, 조경업연방신용보증조합과 공업연방신용보증조합 등 4개의 연방신용보증조합(Bundeskreditgrantiegermeinschaften)이 조직되어있다. 이 4개의 연방신용보증조합과 요식업신용보증조합 공동위원회(Gemeinschaftsausschuss der Bundeskreditgemeinschaften)에 대표를 파견한다.

이 연방신용보증조합 공동위원회는 대외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은행감독원, 행정부처 또는 경제수석협의회 등에 대하여 모든 신용보증조합의 공통 관심사를 대변한다. 대내적으로는 조합원의 신용보증 액이 2,000만 마르크를 상회할 경우 심의하게 된다. 연방과 주는 보증부도 시 채무이행의무로 인한 위험을 분담한다.

5) 영국의 사례

(1) 소기업 자금지원 제도

영국에는 종업원 수, 연간매출액, 총자산, 소유지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종업원 10명 이하를 영세기업으로 분류하며 <표 2-6>과 같다.

<표 2-6> 영국의 영세 중소기업 분류기준 15)

기 준	영세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
종업원 수	10명	50명	250명
연간매출액	—	7million euros	40million euros
총 자 산	—	5million euros	27million euros
소 유 지분	—	25%	25%
비 고	—	2가지이상 충족	

영국의 소규모 사업 자금 투자 지원제도는 80년대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제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했으며, 90년대에는 이를 더욱 확충했으나 영국의 벤처산업육성책은 미국과 같이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5) 영국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지원시책, 중소기업청, 1998, 이남주, “전계논문”, p 42에서 재인용.

그러한 제도는 크게 벤처캐피탈 신탁회사 제도, 벤처캐피탈 투자신탁 제도, 주식매각의 과세 연기제도, 대체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 제도, 보증제도가 있다.

벤처캐피탈 신탁회사(Venture Capital Trust, VCT)제도는 보험회사, 투자 금융회사 등이 관리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펀드 회사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개인들은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enture Capital Investment Trust, VCIT)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회사이다. VCIT투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이 1,000만 파운드 이하인 비상장주식(대체투자시장의 상장주식도 포함)이다.

주식매각의 과세 연기제도는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 이익을 적격 미공개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주식매각 이익에 대한과세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연간6,000파운드까지의 주식매각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여타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고액소득자는 상장주식의 매각이익을 일정기간 동안 납세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투자된 미공개기업의 주식이 매각될 때 과세된다.

대체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 제도는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95년 6월에 개설되었다. AIM은 기존의 3부 시장인 Rule 4.2시장에서 발전된 시장으로, 제1부 시장에 비해 상장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단지 사업설명서만 제출하면 등록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증제도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보가 없어서 일반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은행이나 금융단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보증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대출 기간은 2년~10년이고 규모는 수천~수십만 파운드 정도이며 2년 이상 사업이 진행된 사업체는 5만 파운드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출 규모 중 중소기업청은 대출액의 70%(2년 이상된 사업체는 85%)를 보증하고, 대출받는 사업체로부터 대출규모의 1.5%(1년)의 수수료를 받지만, 대출이 고정이자율

을 적용 받게 되면 이수수료의 0.5%를 감면해 준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매출액이 150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은 몇몇 제한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2. 우리나라와 각 국의 비교(시사점)

우리나라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와 외국의 사례비교에 의거한 분석과 평가는 절차, 담보, 구비서류, 소요시간, 우리나라의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의 한계점 5가지로 다루고자 한다.

1) 절차의 경우

절차의 경우 는 미국의 소액담보대출 역시 크게 정부의 지원으로 보증을 위한 심사 및 보증절차의 추진단계와 이러한 보증을 근거로 대출이 일어나는 대출과정의 두 부분으로 대별된다. 특히 미국의 보증 및 대출절차에 있어 강조되는 것은 투명성과 신속성이라 하겠다. 한국의 경우, 보증심사기관의 심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는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적인 내부사항으로 대출신청인이 알 수 없도록 추진하는 데 비하여 미국은 사전에 공개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대출신청인과 합의 형식으로 바로 즉석에서 그 결과가 통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출의 투명성과 신속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대출에 앞서 보증이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나 상공회, 조합 등에 의한 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다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출절차와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본의 소액대출은 주로 1년 이상의 경영실적과 지역 내 기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의존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창업 자체에 초점을 두어 미래지향적인 객관적 체크리스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고 하겠다.

일본식 절차에 있어서 대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기존의 상공회나 조합과 같은 자치단체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대출에 대한 보증대신에 이러한 지역 조합의 추천이 대출의 핵심적 요소이며 국민금

융공고라는 특수목적의 정부산하의 대출기관이 소액대출을 책임진다는 점이 보증
을 위주로 하는 미국이나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일본의 대출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합이나 상공회의
소 등 각 지역별 자치단체에 대출추천이나 보증우선심사권을 부여하여 보다 현지
밀착적인 대출절차의 체계정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미국과 같이 보증
및 대출관련에 있어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의 지나친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한
공개적인 체크리스트 기법과 같은 투명한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담보 부분

창업을 희망하는 한국의 소상공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담보 또는 보증과
관련된 재원조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담보
없이 대출을 희망하여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담보를 대신하는 보증지
원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미국과 같은 선
진국에서는 담보 없이 대출이 추진된다는 단순한 가정 하에 신용위주의 대출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선진국형 대출은 잘못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국의 대출은 과반수 이상이 담보 소액대출이며,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에도 단계별 대출을 통하여 대출상환실적과 경영활동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하여
대출규모를 늘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지나친 무담보 선호형
대출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의 대출이 대부분 일회한
의 비교적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형 소
액대출과 비교하였을 때,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미국에서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정부의 보증이 전체 대출금액의 85%선
에서 그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기관의 위험 분담률을 높여 대출의 타당성과 합
리성을 스스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
한 미국의 취지를 이어받아 최근 들어 대출액 대비 보증비율을 조금씩 낮추어가
고 있는 바, 이러한 보증부분의 부족분은 일선 금융기관에서 꺾기 기타의 형태로
대출신청인에게 부분적으로 전가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
저한 사전대비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일본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상공회로부터 6개월간의 경영지도를 받고 소액대출
추천을 받으면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해준다. 이러한 무담보 무보증은 그러나 지

역내 조합 등 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사전에 상당한 신뢰기반과 경영실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달리 해석하면 전인격적인 대출신청인 자체의 신용도에 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설비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물적, 인적 담보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무담보 우선 정책은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대두분의 소상공인은 영세민 수준의 경우로써 정부의 지원 외에는 독자적인 자금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담보가 어찌할 수 없는 선택적 전략일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본의 전인격적인 대출신청인 자신의 오랜 인간성을 통찰할 수 있는 조합 등의 도움을 받거나 미국식의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체크리스트 기법을 동원하여 무보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구비서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하여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구비서류가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미국의 간편서류 대출방식(LowDoc Program)도 대출자의 준비서류를 간소화시켜 3일 이내로 결과가 나오는 대출제도이다.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의 대출서류가 그다지 복잡한 것은 아니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한국의 대출서류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필요이상의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인데 서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과 연구 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의 복잡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지역내 상공회, 상공회의소나 조합의 경영지도원이 서류준비를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한 점이다.

4) 소요시간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대출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수반을 근거로 다양한 대출의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나,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대개 생계형으로 다른 자금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출의 절실한 필요와 위험의 분산적인 차원에서 소액대출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액대출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의 접수시점에 검토결과 및 그 기한을 경지함으로써 대출의 신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영지도원이 모든 대출업무에 참여함으로써 대출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보증심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소액대출과 관련된 주요한 불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은 재고를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950여개의 SBDC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상공회나 상공회의소가 전국에 약 3,000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을 대신하여 최소한 소상공인지원센터만이라도 전국적으로 보다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5) 우리나라의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의 한계점

마지막으로 한국의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의 한계점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외국의 제도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다단계 과정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대출과정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추천, 신용보증 기관에서의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등 분리된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용자들로부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특별 신속대출과정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경직된 시스템이다. 특별히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미국의 LowDoc program(3일 이내에 가부간에 결정)처럼 신속하게 자금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제도가 없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이 단조롭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금, 설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미국에는 정상적인 대출제도 외에도 소액 단기대출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네 번째로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있다. 여성 창업자금제도, 장애인 자금지원제도 등이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다.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서(85% 보증)를 가져오면 거의 대출해 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기관에서 업무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도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3절 분석체계

1. 분석국면 및 변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운영과정 즉, 준비과정, 집행·운영과정, 사후관리 과정의 3개 단계로 구분하여 사례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 2-7>과 같이 분석변수를 설정하였다.

준비과정에서는 법령제정, 담당부서의 설치 및 인력확보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운영과정에서는 예산확보, 금융기관과의 협약, 심의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 심의확정(자체심의, 금융기관심의), 운전자금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분석하였다.

사후관리단계(사후관리 과정,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대출형태, 대출이율, 자금회수, 평가결과 활용(익년도 반영) 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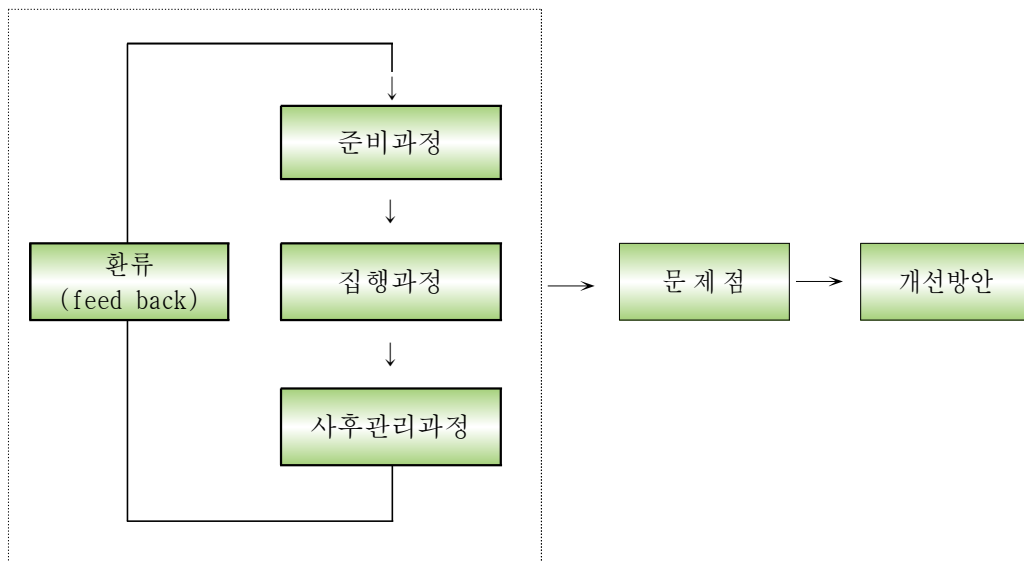
<표 2-7> 분석 변수

단계(과정)	측 정 변 수	비 고
준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제정 - 담당부서의 설치 및 인력확보 	
집행·운영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확보 - 금융기관 선정 - 심의위원 위촉 - 대상자 선정 심의확정(자체심의, 금융기관심의) - 운전자금 용자 -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형태 등(분석) - 자금회수 - 평가결과 활용(다음년도 반영) 	

2. 분석의 틀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1항에서 설정, 제시한 분석국면 및 변수를 결합하여 <그림- 2> 와 같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2> 분 석 모 형



제3장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고창군 사례 -

제1절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1. 고창군 사례

1) 소상공인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고창군 소상공인은 2013년을 기준으로 1~4명 업체가 3,653개 업체에서 6,392명, 5~9명 업체가 258개 업체에서 1,666명 총 3,911개 업체에서 8,058명이다. 이는 고창군 인구의 13.4% ¹⁶⁾에 해당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3- 1>과 같다.

<표 3-1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연도및 읍면별	합 계		1-4명		5-9명		비 고
	사업체수	종사자수 ¹⁾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	3,872	7,818	3,641	6,305	231	1,513	
2013	3,911	8,058	3,653	6,392	258	1,666	
읍 계	1,885	3,917	1,761	3,118	124	799	
면 계	2,026	4,141	1,892	3,274	134	867	

자 료 : 고창군 기획예산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14.2

2) 지원내용(지원기준)

(1) 지원규모

2011년 상반기 1,447백만원, 하반기 793백만원 총 2,245백만원 지원 2012년 상반기 850백만원, 하반기 747백만 총 1,597백만원 지원, 2013년 1,468백만원 지원 총합계 5,310백만원을 용자 지원하였다.

16) 고창군 인구 : 60,049명, 2013.9.31기준

(2) 융자대상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와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중인 자는 제외한다.

(3) 제외대상 업종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매년 선정하는 업종으로 <표3-2>와 같다.

(4) 지원한도

융자한도는 1인당 2천만원 이내이며 다자녀(3명이상) 가구는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¹⁷⁾

(5) 대출금리

소상공인과 금융기관의 약정 금리이며, 고창군에서 이차보전 4%를 지원한다.

(6) 지원기간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 1년 이내 연장 가능하며, 이차보전 한도는 융자금액과 동일하고, 이차보전 기간은 융자기간과 동일하다.

(7) 자금대출

전북은행,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대출을 실시하였다.

(8) 신청절차

융자는 각 읍·면을 통한 접수 후 고창군(민생경제과)에서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17) 당초 1인당 1천만원,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 이었으나 의회에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표3-2> 소상공인 지원 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77,3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9) 신용보증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다.

(10) 이차보전

이차보전지원율은 연 4% 이내, 이차보전 지급은 반기별로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3) 개선내용

개선내용은 2011년도 최초 실시후 운영상 들어낸 문제점을 개선하여 차기년도에 반영한 내용들이다.

(1) 금융기관 확대

2011년도 상반기는 금융기관을 전북은행으로 한정했으나 하반기 부터는 농협중앙회로 확대하였다.

(2) 보증서 발급 확대

당초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담보제공을 하였으나 담보제공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많아 고창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협조를 요청하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발급을 확대하였다.

2. 타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현황 18)

1) 지원방식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지자체별로 지원형태나 방법에 따라 다르며, 직접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해당지역의 현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목적은 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시설, 운전), 시장 재개발사업지원, 지역 특화품목지원 등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8) 윤상용 외, “전계논문”, pp45~50. 재구성

직접융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직접 융자하는 방식이며, 지자체는 정책수립, 기금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자금지원 기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업체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접수를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융자 결정 업체를 지자체와 협약한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금융기관은 별도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실행을 하게 되는 대리대출 지원방식이다.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방식은 지자체별로 지원내용과 방법에 있어 차이가 존재, 이는 협조융자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비용경감 등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방식, 대출 금리는 융자취급 은행별로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적용하되 자치단체가 1.36%~3.5%의 금리를 보전한다.

2) 지원사례

지자체별 사업유형 및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지역**은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은행 협력자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1~2%p의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의 변동금리로 시설자금과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지역은 80억 원의 자금을 약 3%의 변동금리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지원, **울산지역**은 100억 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면서 2%p를 이차보전, **대구지역**은 총 1,500억 원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골목상점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면서 2~3%p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광주지역은 시 차원에서의 특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은 없지만, 광주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2%의 이차보전을 지원, **대전지역**은 50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과 2~4%p의 이차보전을 지원, **경기지역**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 등을 위해 4.3%의 고정금리로 45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의 소상공인 특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지역은 350억원과 2%p의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충남지역** 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800억원을,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기금을 위해 50억원의 자금과 1.75~2.0%p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전북지역은 도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950억원의 정책자금을 변동금리 4.4%(1% 이차보전)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100억원의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의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이차보전 등을 지원, **경북지역**은 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은 250억 규모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4.1% 금리로 운영, **제주지역**은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소상공인 창업,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자금의 경우 2.8%, 우선자금의 경우 3.5%의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 장수군이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3-3>과 같다.

<표3-3> 전라북도내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지역	자금명	규모 (억원)	금리	지원한도	상환기간
전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50	변동금리 4.4% (1.0% 이차보전)	• 시설: 7억원/운전: 3억원 (소상공인 점포개선 5천만원)	시설: 3년거치 5년 운전: 1년거치 2년
	정읍시 영세소상공인특례 보증	1	4% 고정금리 (초과분 시보조)	▪ 1천만원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고창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	4% 이차보전	• 2천만원 (3명이상자녀가구 3천만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순창군 시설개보수 사업 보조금	4	은행협약자금 (4% 이차보전)	• 보조금 2천만원 (총사업비의 50% 병위내), 협약자금 1억	3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13	2%	• 중소기업: 1억 • 소상공인: 3천	2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자영업서비스업 영농산업 소상공인 <각 지역 내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시/군 내 거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 각 지역 관청	

3. 소상공인 지원방식 비교 19)

1) 직접대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이다. 정책자금 지원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책적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적정 거래비용을 보전 받고 정부나 지자체가 심사·선정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지만 신용위험부담은 은행이 지게 되므로 은행은 정부나 지자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고성장 분야 또는 창업기업 등 정보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대한 대리대출 실행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자연히 정책자금의 정책적 기능은 약화되게 되기 때문이다.

2) 이차보전

정책당국이 대상자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을 지정하고 금융회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차입자를 선정하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재정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차보전 방식은 지자체가 조건을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조건 충족 여부와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자금을 대출하되 이자의 일부분을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수단, 이는 차입자 선정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의 장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차입비용을 낮춰주는 효과, 또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대상자를 선정한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게 되므로 금융회사가 대출대상 기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지자체가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차입자 선정에 있어 금융회사가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금융회사가 손실 부담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

19) 윤상용 외, “전계논문”, pp52~54.

3) 간접대출(on-lending)

정부나 지자체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회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정 정책대상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대출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수단, 이 방식은 민간금융회사의 심사, 집행, 사후관리를 활용하는 간접지원으로서 시장 친화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자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장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되 미리 선정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출사고의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직접대출 방식의 정책자금과 차이가 있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부도위험이 작은 양호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대출 방식의 성패는 온렌딩 대출 운용실적 분석 결과를 통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간접대출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4) 신용보증(credit guarantee)

신용보증은 정책당국이 설정한 여건에 맞는 차입자 중 대상자를 금융회사가 직접 선정하고 대출을 실시하며 정책당국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은 차입자금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상환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수단으로 이는 상환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나 자본시장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채무이행을 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 정책수단이다.

제2절 운영실태 분석

1. 준비과정 분석

1) 법령제정(조례, 규칙)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0. 9월 전라북도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2011.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고창군의회에서는 고창군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주

요내용은 <부록 - 1> 과 같다.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은 2010.11월 제정하여 2011.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부록 - 2> 와 같다.

2) 담당부서 및 인력확보

소상공인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담당부서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기존의 지역경제담당(3명)에서 지역경제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소상공인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주사보)하고 있다.

2. 집행·운영과정 분석

1) 예산(기금)확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확보는 2011년부터 매년 10억씩 3년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였다(제3조).

시행 첫해인 2011년에 본예산 5억 원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여 당초 10억 원 목표에는 부족하였다. 2012년도에는 본예산 3억 원 추경2억 원을 확보하여 목표액 10억 원에 못 미치는 5억 원을 확보하였다. 2013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였다. 3년간 목표액 30억 원 중 21억 원으로 70%에 불과하였다.

<표 3-4 >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 목표액 및 조성액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기금조성 목표액	30	10	10	10	
기금 조성액	21	6 (본예산+추경)	5 (본예산+추경)	2 (본예산+추경)	
차 액	-9억원	-4억원	-5억원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2) 금융기관 선정 · 협약

고창군에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은 전북은행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고창군에 소재하는 제1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 두 곳이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고창군 금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자금은 전북은행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은 당초 전북은행 1개 금융기관만 협약하였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농협중앙회와 기타 은행을 더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 1개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을 하는 데는 소상공인들의 불평이 많았다. 따라서 2011년 하반기부터는 대출기관을 당초 전북은행에서 농협중앙회를 추가로 늘려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3) 심의위원 위촉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0. 9월에 『동시행규칙』은 2010. 11월에 제정하여 2011.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²⁰⁾ 이에 따라 고창군에서는 2011. 1. 13일 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위원구성을 보면 고창군의회의원 2명, 민간인(은행) 1명, 소상공인과 관련 있는 실·과·소장 3명으로 위촉하였으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었다.

4) 대상자 선정 자체심의

고창군에서는 2011. 1월 공고를 통하여 상반기 179명 하반기 62명을 접수받아 고창군자체심의를 통하여 신청자 모두 적격자로 심의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 2012년에는 상반기 67명 하반기 46명 총 113명 접수받아 자체심의를 한 결과

20)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동시행규칙』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고창군 소속 실·과·소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되어있다.

2명의 결격자를 제외하고 모두 적격자로 심의하였다. 자체결격자는 이미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중인 소상공인 이었다. ²¹⁾ 2013년도에는 상반기 61명 하반기 42명 총 103명의 접수자를 모두 적격자로 심의하였다.

5) 금융기관 심의

고창군으로부터 적격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접수를 받은 후 자체심의를 하였다. 자체심의를 한 결과 적격자는 2011년 241명중 101명 42%만 적격자로 선정되어 대출이 가능하였다. 2011년도에 총 22억 4천만 원이 융자되었다. 대출 불가를 분석해보면 부적격자 140명으로 58%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적격자 50명, 본인취소 42명, 미 접수 47명이나 되었다. 부적격자는 대부분 신용이 불량하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취소 미 접수도 대부분 신용이 불량하여 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 부족 까다로운 구비서류 등으로 취소하거나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영세업자이고 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으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 심의 시 구비서류는 신용보증 대출시 신용보증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1통이면 가능하지만 ²²⁾, 부동산 대출시 ²³⁾ 인감증명 외 4가지가 더 필요하다. 신용대출시 ²⁴⁾는 신분증 외 6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21)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22) 전라북도내 신용보증회사 : 신용보증기금(정읍지점), 전북신용보증재단(전주지점)

23) 부동산 대출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권리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도장

24) 신용대출시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 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통, 지방세 완납증명서(읍면사무소),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장 현황보고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소유부동산 현황

<표3-5> 금융기관 적격심사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신 청		적격자		대 출 불 가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부적격	본인취소	미접수	기 타	
계	457	11,814	251	5,035	206	81	64	61		
2011	241	5,490	101	2,240	140	50	43	47		
2012	113	2,555	78 (69%)	1,597	35 (31%)	13	10	12		2명 자체결격
2013	103	3,129	72 (70%)	1,468	31 (30%)	18	11	2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2012년도 금융기관 자체심의를 보면 113명 신청자중 적격자는 78명(69%) 자체 선정 되었다. 대출 불가 소상공인이 2011년도 58% 하반기 42%, 2012년도 35%로 2013년도 30%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이유는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담보제공 등의 요구사항이 소상공인에 알려지면서 용자가 다소 불리한 자금신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을 통한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표3-6> 과 같다

기금을 전북은행에게 예치하여 기금의 3배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는 협약과는 달리 농협중앙회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통하여 융자조건만 갖추면 자체내규에 따라 융자를 하였다. 따라서 고창군에서는 기금의 3배보다 더 융자를 할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표3-6>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실적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51	5,310	101	2,245	78	1,597	72	1,68	
전북은행	143	3,60	92	2,045	23	445	28	270	
농협중앙회	108	2,250	9	200	55	1,152	44	898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7) 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금이란 이차차액보전금으로 금융기관의 이자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여 일정액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몇몇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4%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며 고창군에서 유례없이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창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산업화 시설이 낙후하고 농어업 및 축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으로 2013년 기준 3,911사업체에서 8,058명이 종사하고 있다. 고창군 인구의 약 13.3%를 차지한다.

<표3-7>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금융기관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954	351,619	166	55,310	322	121,091	466	75,218	1명 회수
전북은행	645	238,571	1575	52,422	216	83,875	272	102,274	
농협중앙회	309	113,048	-	-	106	37,214	194	72,944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소상공인 운전자금지원은 먼저 각 금융기관에서 개인별로 이자를 산출하여 고창군으로 요구하면 고창군에서 금융기관에 4%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지원실적을 보면 <표3-7>과 같다. 1인당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2천만원 융자시 년 80만원 다자녀인 경우 3천만원 융자시 년 1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서를 보면“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1년거치 2년상환)이내로 하고 “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분할 상환시 총 180만원, 일시상환하고 1년 더 연장할 경우 320만원의 이자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차보전제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 사후관리과정 분석

1) 소상공인 대출형태 분석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 형태를 보면 <표3-8>과 같다. 대출형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서 대출 형태를 이루고 있다.

2011년도 담보대출 28% 신용대출 23%, 보증서 대출 49%로 상호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담보대출 23%, 신용대출 19.3%, 보증서 대출 57.7%로 보증서 대출이 50%를 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보증서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11년도에 많은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였으나 금융기관 심의에서 소상공인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표3-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1년 241명이 신청하였으나 적격자는 101명으로 4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는 113명 신청 중 73명 69%, 2013년도에는 103명 신청 중 72명으로 72%나 되었다. 이 같은 이유는 대출형태가 담보나 신용대출에서 보증서 대출형태로 옮겨가는 현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3-8> 대출형태별 분석

(단위 : 명)

연 도	인 원	대 출 형 태				비 고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기관 (보증서)	기 타	
계	179	46 (26%)	38 (21%)	95 (53%)		
2011	101	28 (28%)	23 (23%)	50 (49%)		
2012	78 (100%)	18 (23%)	15 (19.3%)	45 (57.7%)		
2013	72(100%)	13 (18%)	18 (25%)	41 (57%)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2) 소상공인 대출이율 분석

소상공인 대출이율을 분석해보면 <표3-9>과 같다. 2011년도 2~3%미만이 72%, 7% 이상이 무려 17%나 되었다. 2012년도 및 2013년도는 2~3%미만이 100%를 차지하였다.

고창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7%이상은 무려 11%의 이자를 주고 용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높은 이유는 일부소상공인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소상공인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가뜰이나 경영개선이 어려운데 운영자금 사용 시 높은 이자를 지불한다는 것은 결국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⁵⁾

그러나 2013년부터는 최고 낮은 2~3%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일부 담보능력도 있지만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인 용자를 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아울러 고창군에서도 지역 보증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보증기관에서도 정부의 시책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증서를 과거보다 쉽게 발급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유례없는 이례적인 시책으로 단체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와 담당부서, 금융기관, 보증지원센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표3-9> 대출이율 분석

(단위 : 명)

연 도	대 출 이 율							비 고
	계	2~3%미만	3~4%미만	4~5%미만	5~6%미만	6~7%미만	7%이상	
계	251	223	1	4	4	6	18	
2011	101 (100%)	73 (72%)	1	4	2	3	18 (17.8%)	
2012	78 (100%)	78 (100%)	—	—	—	—	—	
2013	72 (100%)	72 (100%)	—	—	—	—	—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25) 최초 제시한 금융기관의 이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 대출 : 6.0% → 소상공인 부담 2.0%
부동산 담보대출 : 6.0% → 소상공인 부담 2.0%, 신용대출 : 6.5~12%(개인별 차등) → 소상공인 부담 2.5 ~ 8%
신청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업자등록 증명원,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통,지방세 완납 증명서 (읍면사무소),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소유부동산 현황 등이다.

5) 평가결과의 활용(다음년도 반영)

소상공인 융자자금은 2011년도 최초 융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금회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자금회수에 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및 내규규정에 따랐으며 보통 1년 거치 2년 상환인 경우 2014년도에 최초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금을 융자 후 중도에 폐업을 하였을 경우 자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2012년도에 1건으로 융자금 2천만원을 상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고창군에서 이차보전금을 폐업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당초 1개 기관과 협약하였으나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융자혜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을 2개로 늘렸다.

제3절 문제점

1. 준비과정상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전담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고창군에서도 소상공인을 전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경제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제도가 신설됨으로서 담당자는 오히려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는 시설자금 즉 창업자금이고 고창군에서는 경영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법령을 정비하여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운전자금 융자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2. 집행과정상 문제점

사례에서는 당초 소상공인 운전자금 기금을 3년간 매년 10억 원씩 3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억원만 확보하고 당초목표액보다 9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금융기관은 당초 전북은행 1개소로 한정되었다.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여 전북은행에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융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렴한 융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한정 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북은행 외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거래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고창군에서는 바로 인지하고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융자기관을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였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더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중 의원 2명, 은행 1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나, 민간인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XX협회장 또는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아 심의를 하는데 객관성이 다소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융자대상자를 고창군 자체심의에서는 신청자 대부분을 선정 심의하였으나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최종 권한은 금융기관이다. 아무리 고창군에서 자체심사를 통하여 모두 적격자로 심의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담보 미제공, 구비서류 미비, 신용등급 불량 등 자체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 자치단체간 상호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4%의 이자보전을 통하여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융자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자금의 운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많다. 소상공인은

이 자금을 통하여 이제 막 숨통이 트이려 하면 다시 융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자기간을 장기간 연장하여 소상공인이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후관리상 문제점

사후관리상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대출형태는 대부분 담보, 신용, 보증서 대출로 그 비율이 30~35%로 비슷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담보능력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아무리 고창군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해도 자금을 융자받기가 어렵다는 예기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융자를 권장하고 상호협약을 통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대출이율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2~3%이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4~7%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7%이상인 소상공인도 2011년도에 17.8%나 되었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면 11%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낮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확보시키려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가 필요하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4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비 단계, 집행 및 운영 단계, 사후관리 단계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내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²⁶⁾

1. 실업대책 차원이 아닌 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

소상공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업대책 차원이 아닌 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간 실업대책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생계형 소상공인의 양적 증가를 초래하는 한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양적 증가는 한정된 시장 내에서 수익성의 악화로 연결됨으로써 그간 침체되어온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한계화를 가속화 시켰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이 기업규모에 있어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기업의 생명주기(life-cycle) 측면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 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은 노동정책이 아닌 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경쟁력의 유지나 개선이 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두는 정책접근

소상공인의 특성에 따라 사회 정책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미하되 시장경제의 경쟁원리 중시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추구라는 지자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적 지원은 경쟁력의 유지나 개선이 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두는 정

26) 임길상, : 전계논문, pp 55~57

책접근이 필요하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기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경쟁력이 있거나 경쟁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차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표보다는 산업조직 정책 차원에서 사업의 애로요인 해소, 협업화 등 사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부문의 과잉화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적증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생계형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지양하고 소상공인 창업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을 양산하는 지원보다는 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창업은 경쟁의 촉진을 통해 시장참여자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현상유지형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형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 창업의 활성화보다는 소수이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창업 이후 소상공인이 안정화 단계에 들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성공률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생력 내지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한계화 또는 한계화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아닌 자생력 내지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생태계의 건전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효율성이 떨어져 한계화 되었거나 한계화의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부문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나아가서는 사업의 정리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전환이나 사업정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 내에서 소상공인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지 아니면 별도의 법제 내에서 다루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소상공인 부문의 효율성을 위해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들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 소상공인 부문에 대해서는 사회정책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되 한계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사업을 전환·정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4. 유형별로 차등화 하는 정책체계 구축

소상공인의 정책은 혁신형·현상유지형·한계형 등과 같이 소상공인을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별로 차등화 하는 정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각각의 유형별로도 소상공인의 업력 또는 기업가형이나 생계형이나에 따라서 정책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소상공인 정책도 필요하겠으나 성장가능성과 성장단계별에 따라 차등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생계형보다는 기업가형의 소상공인을 지원해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므로 생계형의 소상공인은 한계화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기초적인 소상공인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구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차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소상공인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기초 통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원정책별로 정책내용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개발·활용하고 중간 실적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평가를 받은 정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행을 중단하는 3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평가사업단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제도별로 제대로 된 지원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

판단하도록 한다. 나아가 현장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 및 정책성과 포상제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상부에서는 총괄지표만 통제하고 정책 전달체계의 최말단 조직이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지원정책의 투명화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의 현장 밀착화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의 성과와 지원 인력의 후생을 연계하는 이익공유제(profit-sharing)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2절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1. 준비과정상 개선방안

1) 전담부서 설치

소상공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업구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이나 축산업, 수산업은 별도의 과나 담당부서가 있어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감안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법령제정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사례에서는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상기에서 지원하

27) 제7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는 자금은 창업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사례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므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상기 기관에서 지원받는 자금은 저리용자이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에서 지원하는 용자 및 이차보전금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집행·운영상 개선 방안

1) 충분한 기금확보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에서는 당초 30억원 기금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계획보다 9억 원이 부족한 21억 원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당초 목표의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선 단체장의 관심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단체장을 설득하고 의회의 충분한 협조를 구하여 기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소상공인의 용자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용자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여러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소상공인에게 그곳에서만 용자를 하세요 라는 식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지역의 금융권은 대도시에 비하여 영세함으로 지역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과 상호 공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여러 곳의 금융기관과 상호 협약을 통하여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대상자 심의 시 객관성을 확보(심의위원 다양화)하여야 한다.

심의위원 대부분 행정기관에 재직하는 공무원과 의원으로 구성될 경우, 이는 전문성 결여로 심의 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을 다양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직능별 소상공인대표, 시장 상인회장 등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시킬 필요가 있다.

4) 운전자금 융자 시 구비서류의 간소화시켜야 한다.

지자체에서 융자대상자를 심의선정해도 금융기관에서 융자 시 까다로운 구비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도에 융자를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특히 신용대출시 무려 7가지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자체 선정한 만큼 금융기관에서 융자 시 최대한 구비서류를 완화시켜야 한다. 지역소상공인이 잘되어야 지역 금융기관도 살아나기 때문에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5) 신용보증기금의 확보 유치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특히 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일정 보증금을 유치하여 이를 담보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제도는 신용보증기금 유치 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관계로 각 지자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증기금 유치금액보다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봐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예치하면 10~20배인 10억~20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방법이다.²⁸⁾

6) 상환기간을 중·장기화시켜야 한다.

현재 2년 거치 3년 상환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이 가는 기간이다. 즉 어느 정도 자금을 융통시켜 안정을 기할 시기쯤 자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따른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5~10년으로 장기화 하여 소상공인이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8) 신용보증센터와 상호협약에 의해 보증금액 확정 : 신용보증센터 실무자 전화상담

3. 사후관리상 개선 방안

1) 신용보증 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담보제공, 신용대출 등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보증서 1장이면 대출이 가능한 신용보증서 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신용 보증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약을 통하여 신용보증서를 확대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자체 / 금융기관 / 신용보증재단 협의체 구성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이율은 소상공인의 담보능력, 신용도 등에 따라 많은 차이기 난다.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지자체와 금융 기관간 긴밀한 상호협약에 따라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지역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금융기관도 성장유지 할 수 있는 기틀 속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수시로 소상공인의 폐업여부와 타 지역 진출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이차보전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진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이차보전지원을 제한하고 융자금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센터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결 론

제1절 요 약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체장이 선거직이 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의 선거공약과 표를 얻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여러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며 운영제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실적(outputs)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한 소상공인들도 다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고창군)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준비과정부터 사후관리과정 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과정별로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에 관한 기초연구가 미흡하고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첫째, 준비과정상 문제점으로는 전담부서의 기구(인력) 미설치 및 전문성 부족, 법제도적 내용의 기반이 빈약하였다.

둘째, 집행과정상 문제점으로는 기금확보 부족, 대출기관의 제한, 심의위원 전문성 부족, 대출시 구비서류의 복잡, 상환기간의 단기성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셋째, 사후관리 단계상 문제점으로는 대출시 담보능력 부족,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대출받기가 어렵고,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확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내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실업대책 차원이 아닌 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

둘째, 경쟁력 유지나 개선이 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두는 정책접근

셋째, 자생력 내지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넷째, 유형별로 차등화 하는 정책체계 구축

다섯째, 기초적인 소상공인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또한 각 단계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었다.

첫째, 준비과정상 개선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법령을 제정비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운영·집행과정상 개선 방안으로는 충분한 기금 확보, 소상공인의 용자 선택의 폭 확대, 대상자 심의 시 객관성을 확보(심의위원의 다양화), 용자 시 구비서류의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확보 유치, 상환기간 중·장기화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신뢰를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후관리상 개선 방안으로는 신용보증 대출 확대, 금융 기관간 긴밀한 상호협약에 따라 낮은 금리 적용,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결 어

정부정책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갖는 의미는 한국경제와 지역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중심의 의사결정, 높은 사금융 의존도 등으로 인해 국

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만 일부 지원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이 실업대책 내지 생계안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고용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창업이 용이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여 창업을 위주로 한 지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리고 전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 부문의 과잉심화 그리고 수익성 악화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생계형 창업촉진 → 수익성 악화 → 부실화 → 자금투여 → 과잉심화 및 부실화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²⁹⁾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보다는 기존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초자치단체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실증적인 사례연구와 외국 등의 관련사례 비교,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의 비교, 그리고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 및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소상공인과 실무자 일선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차원의 소상공인 정책지원 제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9) 임길상, “전계논문”, p 51.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구병성.(2009).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한민국국회.
박정구·홍충기. (2008)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편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 주요논문

- 강현화.(2010).“지역 소상공인의 경기인식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분석”, 동남권산업 동향분석. 제2호(2010년 5/6월)
남윤형.(2013).“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서울경제. 통권95호 (2013.2)
윤상용.(201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이남주.(2003). “소상공인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길상.(2006).“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희철.(2009).“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서비스품질 만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순영.(2007).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 강화와 성공창업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기 타

- 고창군.(2010), “고창군 내부자료”
_____.(2011), “고창군 내부자료”
_____.(2012), “고창군 내부자료”
_____.(2013), “고창군 내부자료”

<부록-1>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자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30억원 이내로 한다.

③ 기금의 조성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도마다 1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이차보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따른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예치기간·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② 융자금의 대부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7조의 융자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외대상 업종)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에서 선정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단, 소상공인 중 다자녀(3명이상) 가구는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③ 융자절차 및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이차보전 한도는 제10조제1항의 융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제11조의 융자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연 4%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금 지급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기간과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융자금·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2>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고창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고창군 소속 실·과·소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용자대상자 심의·의결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부신청)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 적격자 중에서 필요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 ① 금융기관은 반기별로 월 15일(6. 15, 12. 15)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반기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